주간 윈지
Weekly WinG

발 행 일 2026년 11월 24일 (Vol. 117)
발 행 인 (주)윈지코리아컨설팅
연 락 처 (02) 761-0608
사업자번호: 107-87-20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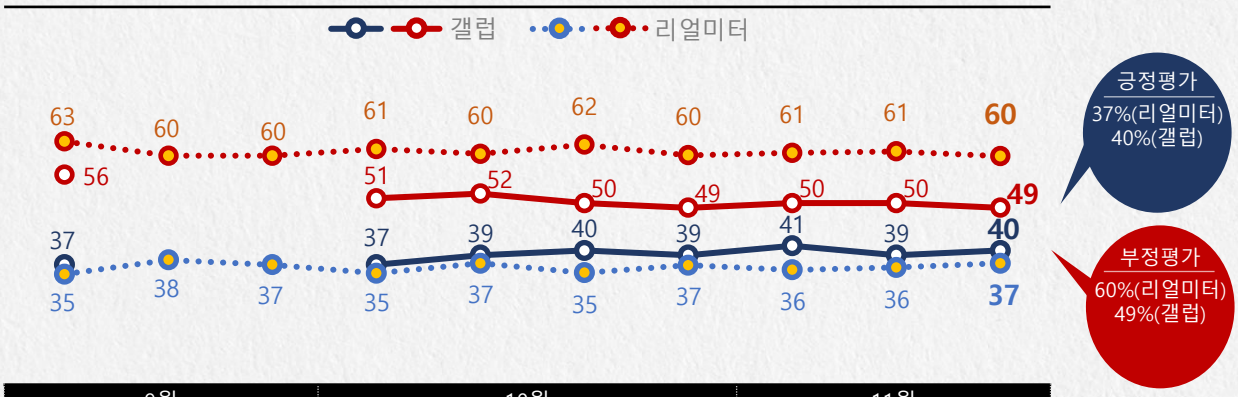
01 금주의 화두 :

▪ 한덕수 파기환송의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 민주개혁진영이 해야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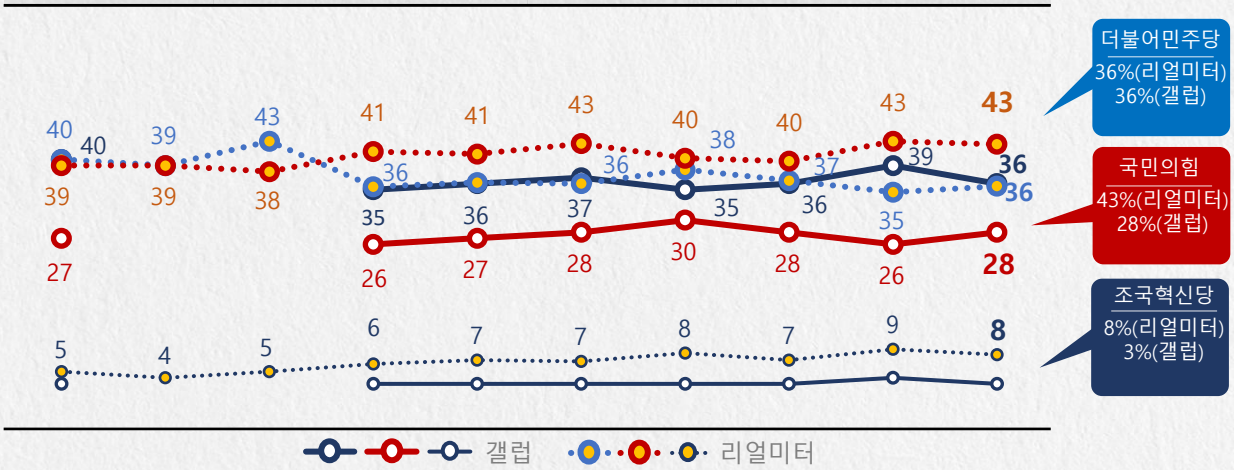
02 주간 여론 동향 (9월 3주 ~ 11월 3주, 갤럽 CATI·리얼미터 ARS)

※ 뉴스·정세 11월 24일 기준 / 여론조사는 11월 23일 발표분까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정당 지지도



정치권 주요뉴스

- **(11.18)** 한중 정상회담·FTA 후속협상 타결 /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무죄
- **(11.19)** 대법, 한덕수 내란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 **(11.20)**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 채택 / 연내 조기 발의 방침
- **(11.23)** 외교·통일·행안·문체 장관 후보 지명 / 국정원장 후보 강금실 발탁
- **(11.24)** 정부, 2027년 경제정책방향 골자 보고 / 국민 삶의 질 지표 개발 추진

※ 11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

		조사개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정당지지도			
		조사기간	사례수	응답률	긍정	부정	GAP (긍정-부정)	민주	국힘	혁신	(無)
CATI (가상번호)	NBS	11/9~11	1,001	14%	44	47	(-3%p)	35	25	4	(33)
	갤럽	11/17~19	1,001	10%	40	49	(-9%p)	36	28	3	(28)
	꽃	11/20~21	1,005	10%	47	52	(-6%p)	39	33	7	(17)
ARS (RDD)	리얼미터	11/16~20 11/19~20	2,514 1,010	3% 3%	37	60	(-23%p)	36	43	8	(8)
	꽃	11/20~21	1,007	2%	42	57	(-16%p)	42	38	10	(3)

여론 동향

- [갤럽] 총선 결과 기대: **정부 지원 37%** vs. **정부 견제 47%**
  향후 1년 경기: 낙관 26% vs. **비관 38%** (비슷 30%)
  향후 1년 살림살이: **낙관 20%** vs. **비관 27%** (비슷 50%)
- [리얼미터] 국정평가: 긍정 37% vs. **부정 60%**
  정당지지도: **민주 36%** vs. **국힘 43%** (양당 격차 7%p)
- [NBS] 대통령 SNS·유튜브 소통: **계속 42%** vs. **축소 51%**
  부동산 정책을 잘할 정당: **민주 29%** vs. **국힘 34%**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잘된 일 41%** vs. **잘못된 일 39%**
- [꽃] 김민석 직무평가: 긍정 27%/28% vs. 부정 **62%/66%**(CATI/ARS)
  장동혁 직무평가: 긍정 25%/31% vs. 부정 **67%/62%** (CATI/ARS)
  수능 부정행위 대응: 긍정 **66%/57%** vs. 부정 32%/38% (CATI/ARS)
  추경호 1심 판결: 무죄 합당 34%/37% vs. 유죄 합당 **54%/51%** (CATI/ARS)
  한덕수 파기환송: 적절 41%/41% vs. 부적절 **53%/53%** (CATI/ARS)
  조희대 탄핵: 찬성 **45%/46%** vs. 반대 **50%/51%** (CATI/ARS)

※ NBS는 11월 2주 조사. 꽃 본문은 CATI / ARS 순. 수치·격차는 각각 반올림. 상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03 정세 읽기

한덕수 파기환송의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 민주개혁진영이 해야 할 일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같은 날 김건희에게는 도이치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원심을 확정하면서도,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확정했다.

두 판결 모두 유죄와 무죄가 섞여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무죄 부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덕수 사건의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을 사실상 '내란 가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정면 비판하면서, 판결은 대법관들 사이의 법리 차이를 넘어 조희대 사법부의 헌정 인식에 관한 논쟁으로 확대됐다. 한편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판결은 차기 주자인 오세훈에 대한 면죄부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민주개혁진영에 분노와 위기의식을 불러왔지만, 동시에 6·3 지방선거 이후 분열되고 이완됐던 반내란연합을 다시 묶을 정치적 계기도 제공하고 있다. 여권은 조희대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만 그 계기를 제대로 살리려면 '조희대 개인에 대한 응징'보다 '헌정질서 수호, 사법권의 책임성, 내란 심판의 완결'이라는 더 넓은 전선을 세워야 한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정면충돌

이번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부딪혔다. 다수의견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에게도 국헌문란 결과의 실현을 지향하거나 최소한 용인하려는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의 기준을 이전 판례보다 확 높인 것이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는 계엄을 저지하거나 대통령에게 재고를 요구하려는 정상적 직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2월 3일 밤, 과연 그러했던가?

반면 소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의 위헌성을 인식할 위치에 있었고 이를 저지할 헌법적 의무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심의와 반대보다 정족수 확보와 형식적 회의에 관여했다. 이후 서명 종용과 단전·단수 논의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선포 전부터 내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면 친위 쿠데타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는 데 기여한 최고위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극명하게 갈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이후 격렬한 논쟁을 유발했다. 원래 이 사건이 소수의견을 대표하는 오경미 대법관의 소부에 배당되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다는 점에서 조희대에 대한 의혹과 분노는 더 커졌다.

03 정세 읽기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리적 비판 지점

한덕수 행위를 지나치게 분절했다. 계엄 선포 전과 후의 행위를 분리했다. 그의 국무회의 소집, 정족수 확인, 침묵, 서명 종용, 단전·단수 논의는 수 시간 안에 연속적으로 벌어졌다. 행위자의 목적은 사후 행동을 포함한 전체 경과를 통해 추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계엄 선포 이전 부분만 떼어 '합법적 절차를 요구한 행위'로 평가하면, 내란에 절차적 외관을 제공한 실질을 놓칠 수 있다. 소수의견이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가 정상적 국가행위의 외양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한 이유다. 정상적인 국무회의 소집과 내란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형식적 회의는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구체적 맥락과 목적을 중심으로 구분해야 한다.

국무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책임을 지나치게 낮게 봤다. 그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최고위 헌법기관이었다. 그가 계엄을 실질적으로 저지하려 했다면 의안 설명, 국무위원 토론, 명시적 반대, 회의 중단 요구 등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다. 그런데 정족수를 확인하고도 실질적 심의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이후 서명과 단전·단수 논의에 가담했다면 선포 전 행위 역시 중립적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다수의견은 국무회의 소집 자체를 처벌하면 향후 공직자들이 회의를 열지 않는 잘못된 행위규범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소수의견의 지적처럼 핵심은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의도와 방식으로 회의를 형해화했는가다.

국헌문란 목적의 문턱을 지나치게 높였다. 대법원은 단순한 미필적 인식을 넘어 국헌문란 결과의 실현을 지향하고 최소한 용인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내란죄가 목적범이고 형사책임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친위 쿠데타에서 고위공직자들은 노골적으로 내란을 지지하기보다 절차와 행정으로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 목적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면 내란의 설계자 외에 이를 행정적으로 가능하게 한 핵심 조력자들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내란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란에 가담한 국가 엘리트의 책임은 제한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03 정세 읽기

민주개혁진영에는 반전의 기회이자 역풍의 계기일 수도

6·3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전당대회를 전후해 친명·친청·친문 간 갈등이 커졌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속도와 방식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시민사회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한덕수 파기환송은 이 분열의 흐름에 다시 하나의 공통 의제를 제공했다. '12·3 내란을 어떻게 완전히 청산할 것인가.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사법권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헌정질서를 지키지 못한 최고위 공직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조희대 코트'가 명확한 정치적 상대와 개혁 대상으로 설정되면서 전선은 단순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추진으로 돌아서고, 혁신당, 진보당 및 시민사회의 요구가 한 방향으로 모이는 것은 반내란연합 복원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상황 판단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사법부의 행태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에너지를 연합의 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사법부의 부당한 저항을 제압할 정교한 전략과 과정 관리를 통해 명분을 축적해나가야 한다.

너무 앞서 가지도, 지나치게 신중해서도 안 될 것이다. 정략적, 정파적 움직임은 제어되어야 한다. 역풍에 대한 과도한 우려도 제어되어야 한다. 이 기회를 반전의 계기로 활용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 경우 역풍이 시작될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개혁진영 전체의 명운이 걸려 있다.

민주개혁진영이 추진해야 할 것은 반조희대, 반사법부 전선이 아니라 반내란 헌정연합이다. 조희대 탄핵 추진은 그 과정에서 하나의 계기이자 수단이다. 민주개혁진영은 소수의견을 법리적 기준으로 삼아 판결의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조희대 탄핵은 누적된 위헌·위법 행위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법원행정처 권한 분산, 대법관 추천·제청 과정의 투명화, 중요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와 기일 결정 기준 공개 등 구조적 사법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반내란연합을 민생연합으로 확장해야 한다. 그 동력을 기반으로 부동산과 생활비, 일자리와 자영업 문제를 해결해야만 미래가 열린다.

어려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공공정책·정치컨설팅 그룹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통령 PI를 수행한 전략컨설팅의 강자 / 가장 정확한 조사
지자체, 공공기관 정책홍보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여론조사, 선거컨설팅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정우빌딩 9층(여의도동 13-25)